

2026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렴·인권의 날

Part 1

지난 달 Feedback



Part 1

지난 달 주요 이슈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7월 | 조직문화와 공정성

2026 July I vol.163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19-06

Brief

1	공공-민간부문은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이 발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공공부문은 조직동일시의 영향이, 민간부문은 공익적 동가-윤리적 리더십-레드태이프의 직접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남
2	윤리적 리더십은 성과보다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와 함께 작동할 때 효과적이며, 절차적 공정성 강화가 핵심 과제
3	(사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바이오텍, 공정한 인사제도와 컴플라이언스, 유연한 근무제도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 구축
4	권익위,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통해 글로벌 청렴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 상향을 통해 연구자의 전문성 존중과 제도적 형평성 강화
5	장부,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공시 준비 지원 추진
6	미국, 관세회피 단속 강화에 따라 수출기업의 원산지-품목분류 등 준법관리 체계 강화 필요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7월 1일(대외발행, 통권 163호, 비매출)
발행인: 장일연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6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20 정부세종청사 7층 민원협력담당관실

일반민원상담
☎110

부패공익신고
☎1398

조직문화와 공정성

윤리적 리더십은 성과보다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와 함께 작동할 때 효과적이며, 절차적 공정성 강화가 핵심 과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이 발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공공부문은 조직동일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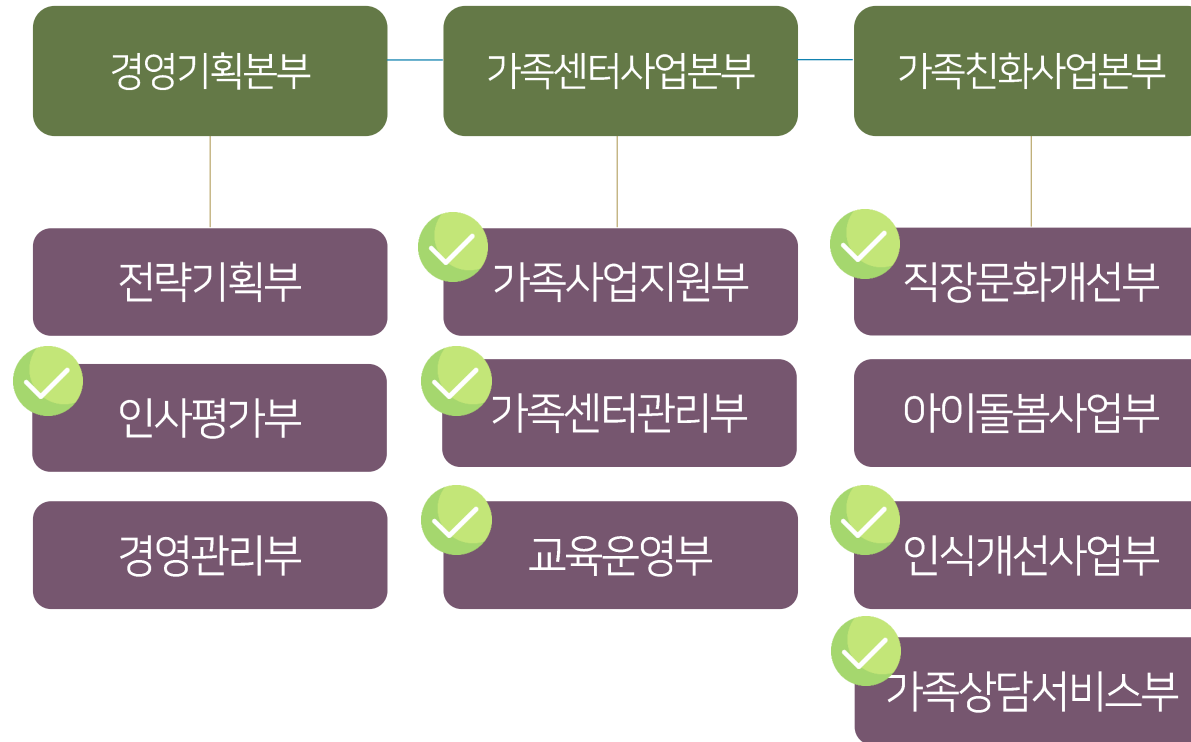


2026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2. 영업용 경량구조 차양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3. 현장 중심의 적극 조정
4. 국민불편 해소 및 행정 신뢰도 제고

지난 달 부서활동 취합 결과

총 10개 부서 중 7개 부서 제출



Part 1 주요사례 및 경영제안 아이디어 공유

교육운영부

□ 2026년 8월 청렴인권의 날 안내자료 공유

- 7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내용 공유
- 조직문화와 절차적 공정성 공유로 공익을 위한다는 착각에 대한 내용 및 절차적 공정성 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 공정한 제도로 만드는 조직문화 사례 공유
- 호의의 경계 내용을 통한 업무윤리 재확인
-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 발전방향: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절차적 공정성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의 재확인을 통한 청렴·인권의식의 지속적인 함양

직장문화개선부

□ 청렴·인권의 날 운영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7월호)」를 회의시간에 공유하고, '조직문화와 절차적 공정성'을 주제로 주요 내용을 논의함. 특히 업무 결과뿐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조직에 대한 신뢰 형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
- 가족친화인증 준비·문화컨설팅 운영 시 기업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되, 대상 선정 및 컨설팅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참여 기업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점검하기로 함.
- 가족친화 네트워크 운영 시 참여기업 및 관계자에게 발언과 의견 제시의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특정 참여자에게 편의가 집중되지 않도록 행사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다짐함.
-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의'와 공정한 업무처리의 경계에 유의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견을 모음. 브리프스의 '호의의 경계' 사례를 보고 공모 평가와 같은 업무에서 공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함.

가족사업지원부

□ 청렴의 날 부서 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7월) 공유(조직문화와 절차적 공정성)
- 윤리 체크리스트 공유: 절차적 공정성 점검 체크리스트
- 공공부문 조직에서 구성원이 의사과정과 절차를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조직신뢰와 업무 몰입에 중요. 리더의 일관된 기준, 구성원 의견 반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설명 등 필요
- 기업사례 공유: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바이오텍
- 채용·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ISO 37001·ISO 37301 기반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운영, 윤리·준법 경영을 핵심 경영 원칙으로 하여 공정·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제도화
- 권익위 및 국내외 동향 공유
- 권익위: '한-UNDP국제 반부패 포럼' 및 청렴콘텐츠 공모전 실시,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 '2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실태 점검 발표(공직자 교육이수율 96.7%)
- 해외: (미국) 관세회피 단속 강화 및 수출기업 준법 관리, (EU) ESG 공시기준 간소화
- 국내: 정부의 AI 법제 대응 협의체 출범 및 ESG 공시 제도화 확정

□ 2026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차양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인제시 중앙정부·지자체·민간사업자 관계별 갈등의 합리적 접근 통한 현장 중심의 적극 조정·해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국민불편 해소 및 행정 신뢰도 제고

Part 1 주요사례 및 경영제안 아이디어 공유

가족상담서비스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7월호 [조직문화와 공정성]

- 절차적 공정성 점검 체크리스트를 파악한다.

1. 조직 환경

- 절차적 공정성을 조직의 정체성으로 확립한다.
- 성과보다 절차적 정상성을 함께 평가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2. 제도

- 불필요한 절차는 개선하고, 필요한 규정은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다.
- 조직의 이익을 이유로 규범을 넘는 행동이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3. 교육

- 실제 업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한다.
- 구성원이 스스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한다.

□ 2026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1.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2. 민원분석 및 법령검토, 적극적인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시설의 과도한 규제 개선 권고
3.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화합의 국면으로 한발짝 나아가는 신뢰 회복을 추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국민불편 해소 및 행정 신뢰도 제고

가족센터관리부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조직문화와 절차적 공정성) 공유

-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조직문화를 위해 부서별 체크리스트 주기적 점검
- 공공·민간의 비윤리적 행동 차이 분석 및 기업 준법경영 사례 공유

□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자료 공유

- 관행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이용자 관점의 적극행정 사례(행정정보 공동이용, 영업용 차량시설 규제 개선 등)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

□ 2026년 8월 “청렴·인권의 날”을 운영하여

- 대상: 전국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총 245개소)
- 각 가족센터 내부 교육, 회의 등 청렴·윤리 의식 향상 활동 장려
-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청렴·인권의 날 활용 자료 배포
- 청렴·인권의 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 자료 배포
 - ①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7월호
 - ②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Part 1 주요사례 및 경영제안 아이디어 공유

인사평가부

□ 도입 목적

- 성과 결과 중심 평가로 인한 비윤리적 행위 예방
- 무엇을 보다 어떻게 달성했는가를 중시하는 신뢰 문화 구축

□ 실행 방안

- 과정 중심 지표 반영: KPI 평가 시 목표 달성도 외에 과정의 정당성 및 규정 준수 여부 항목 반영
- 다면 피드백 도입: 리더의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동료 및 하위 직원이 평가하는 360도 피드백 결합
- 패널티 제도운영: 조직 이익을 핑계로 규범을 위반한 경우, 성과와 무관하게 감점 조치
- 소통 기반 규정 운영: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되, 필수 규정은 구성원에게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

□ 기대효과

- 투명한 과정 평가를 통한 MZ세대 등 임직원 조직 신뢰도 향상
- 편법 성과를 차단하여 사내 법적·윤리적 준법 리스크 사전 예방

인식개선사업부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조직문화와 절차적 공정성) 공유

단순히 “공정하게 하자” 보다 구성원이 실제로 공정성을 체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꼭 부정과 비리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배분과 평가, 포상과 교육, 출장,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반복되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합니다.

공정성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의사결정기준과 과정을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공정성 관련 조사만 하고 끝내지 않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청렴과 윤리경영, 내부통제와 조직문화를 한번에 개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캠페인에 측정 가능한 제도 개선을 한다면 공정성이 더욱 단단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Part 2

이달의 주요 ISSUE

[자료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8월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8월 | 글로벌 반부패 동향

2026 August | vol.164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19-06

Brief

1	OECD, 각국의 반부패 법·제도 확대에도 규정과 실제 이행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험 기반·성과 중심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 제시
2	공공조달의 뇌물·담합·이해충돌 위험에 대응해 공급망 실사, 청렴보증, 행동강령, 반부패 프로그램 등 공급업체 청렴관리 강화 추세
3	(사례) ABB, 이사회·경영진의 감독 아래 제3자 실사·모니터링, 내부 신고·조사, 데이터 기반 점검을 연계한 글로벌 반부패 관리체계 운영
4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 확대와 입찰비리 등 부패 실태조사 강화, 민간기업 청렴윤리경영 진단·컨설팅 등 하반기 반부패 정책 추진
5	프랑스 반부패청, Sapin II 법상 컴플라이언스 미비에 첫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업과 경영진의 반부패 관리 책임 강화
6	국내 ESG 공시 법제화와 EU 역외기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이 추진되며 기업의 ESG·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필요성 확대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8월 1일(매월발행, 통권 164호, 비매물)

발행인: 정일연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6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일반민원상담
☎110

부패공익신고
☎1398

글로벌 반부패 동향

OECD, 각국의 반부패 법·제도 확대에도 규정과 실제 이행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험 기반·성과 중심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 제시

국내 ESG 공시 법제화와 EU 역외기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이 추진되며 기업의 ESG·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필요성 확대

[자료2]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뉴스레터(국민권익) 여름호



국민권익 여름호

침묵을 깨는 용기, '내부고발'이 만드는 변화
조직 내의 비리를 외부로 알리는 일은 조직은 물론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강력한 '자정 작용'을 함.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선물 제공 금지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일반 선물 5만 원,
농축수산물 15만 원까지 허용,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명절 기간에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30만 원까지 상향됨.



Part 3

부서 활동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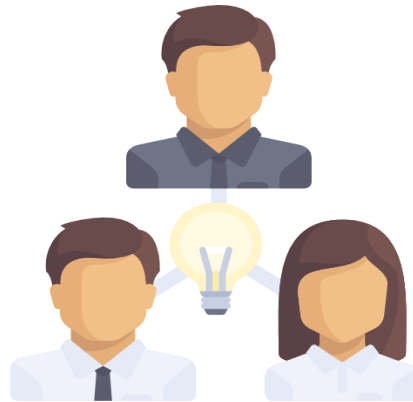
매월 셋째 주는 '청렴·인권의 날'입니다.



9월 '청렴·인권의 날' 부서활동 제출기한 : 10. 14.(수)



게시판을 통해 안내되는
이달의 주요 이슈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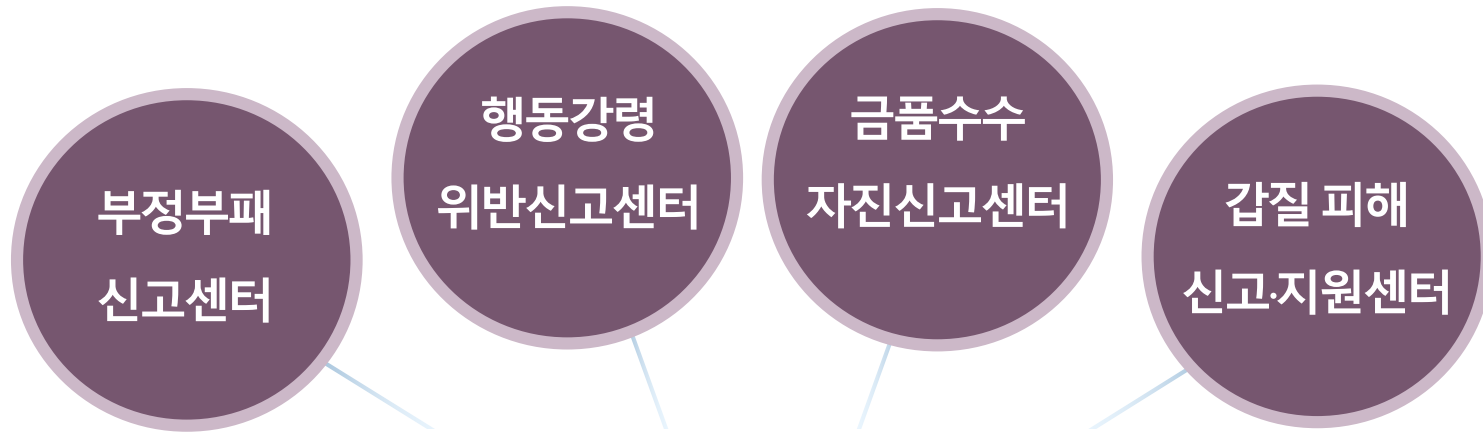
부서회의 등을 통해
안내된 자료 공유, 활동 실시 후
실천사례, 경영제안사항 등 논의 및 도출



청렴리더(부서활동담당자)는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여
윤리감사실로 제출

(양식 활용하여 메신저, 메일 등으로 전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클린신고센터 운영 안내



다양한 신고센터 운영
행동강령책임관의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내·외부 신고 접수 및 조사, 처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신고·진정·제보 등 사안별 조사 후 필요에 따라 특정감사 연계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 노력

윤리감사실

핫라인
clean@kihf.or.kr

청렴포털
cle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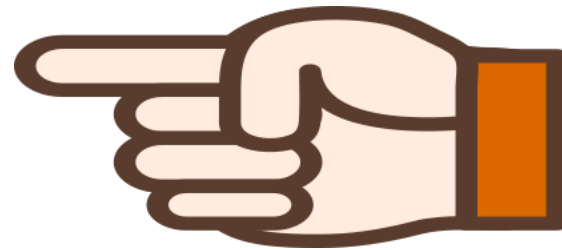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kihf.or.kr
[국민소통] - [신고센터]

갑질옴부즈만
yooppang@naver.com



아니, 이런것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목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갑질 근절 이행지침을 기반으로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에 대해

- ✓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 ✓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 ✓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알기쉽게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갑질 발생 시 처리요령



갑질행위 신고,
제보

가해자, 피해자, 사건관계인
그 누구라도
Kihf홈페이지,
윤리감사실 핫라인,
옴부즈맨을 통해 신고·제보

01



사실관계
조사

신고, 제보 등을 받은 전담직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대처와
개인정보 보호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02



조사결과
조치

조사결과와 갑질이 확인되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03

갑질유형



✓ 인격 비하, 모욕적 언행

욕설,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



✓ 음주나 흡연 강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나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업무 불이익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무시간외 업무지시를 하는 유형



✓ 비인격적 대우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갑질 신고센터



Kihf홈페이지
www.kihf.or.kr
[윤리·인권경영] - [신고센터] - [갑질신고]



윤리감사실 핫라인
clean@kihf.or.kr

갑질 근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모두의 적극적인 의지가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